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광주·전남 당원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 광주서 '국정원 규탄' 대규모 여론몰이

지역당원 보고대회...당 지도부·소속 단체장 대거 참석

박대통령·새누리당 책임론 제기 '선거무효 투쟁' 거론

민주당은 7일 '덧발'인 광주를 찾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등 대선을 전후한 국정원과 새누리당 '정치공작 의혹'을 고발하고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광주·전남 당원 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을 비롯 한 300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단순한 정치행사가 아닌 정부기관 규탄 집회를 갖는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이를 눈감고 민생에만 전념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며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지도부는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광주에서 자신감을 얻은 듯 강한 어조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투쟁'도 거론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과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없었다면 지난 대

선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내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없다면 선거 원천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본부장인 추미애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대선 개입으로 NLL(북방한계선)을 끌어버린 장본인"이라며 "그 대선계락은 신

종 북풍 바이러스를 만들려 했던 것"이라며 대선 기간 중 NLL발인을 통해 여론 조장을 한 김무성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대선 전에 댓글 달고 선거개입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일"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세워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에 이어 9일 전주, 11일 세종시, 13일 부산 등에서 잇따라 당원보고대회를 할 계획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NLL' 출구전략 찾기

남북관계·국익 등 고려 부분 열람·제한 공개 가다

민주당, 남재준·김무성·정문헌·권영세 검찰 고발

여야가 '노무현 전 대통령 NLL(북방한계선) 발언 논란'에서 비롯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출구전략에 한창이다.

그만큼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공개의 여파가 클 것이라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열람·공개가 파문을 가

라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관련 자료를 부분 열람·제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7일 자료 제출과 관련해 공동 키워드 3개를 포함한 모두 7개의 키워드(핵심

어)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공동 키워드는 'NLL'과 NLL의 한 글표기인 '북방한계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3개다. 또 새누리당은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 등 2개를, 민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2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같이 키워드를 골라 제시한 것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열람·공개 대상 기록물이 무려 256만건에 달해 물리적으로 모두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열람 주체에 대해서도 큰 이견

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개 부분에 따라 여야간 특성이 있을 수 있어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를 놓고는 여야간 절충이 필요한 상태다.

여야는 오는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의견 조율한 뒤 10일께 국회 운영위를 열어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물을 오는 15일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및 공개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남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덧글사건' 국정원 직원

진선미 의원 고소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김모(29)씨는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또 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측은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으로 인한 고소인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화 착수

전당원투표 "걱정되네"

민주당 지도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 위한 전(全)당원투표제 도입을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위원장 김태일)가 전날 건의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긍정적으로 접수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7일 밝혔다.

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애초 김한길 대표가 도입 예고했던 전당원투표제 실시 여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주변에선 정치적, 기술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도부가 당원투표 실시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우선, 폐지를 결정했던 당 지도부의 방침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우선 전당원투표 시스템을 최근 개발했지만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안 돼 당장 적용하기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당 사무처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 지난 2~3일 권리당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합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에서는 이에 대해 시스템 시험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조사 결과가 의외로 나왔거나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당원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재외공관 도청 무방비"

미 NSA, 한국대사관 등 38국 도청 의혹 제기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포함하여 유럽연합(EU), 일본 등 38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재외공관들 가운데 상당수는 도청받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는 등 도청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지난 5일 외교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161개 우리나라 재외공관 중 전자파 차폐시설이 설치된 곳은 미국·일본·이탈리아 대사관 등 총 23개 공관(14.3%)이며,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미국·중국·러시아 등 총 37개 공관(22.9%)에 불과했다.

첨단기술을 동원한 국가간 정보전 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80%에 육박하는 재외공관이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암호실, 통신실 및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적 시설보안 대책 이외에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대책, 전자파 차폐시설 설치 등' 추가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더욱이 재외공관에서 사용 중인 도청 방지 장비 가격은 약 500여만원으로, 나머지 138개 공관에 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7억여원에 불과함에도 이들 장비의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정부의 정보 보안 불감증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재외공관은 국가안보·이익과 직결된 각종 정보·기밀의 집합소인 만큼 조속히 정보 보안시설을 확충해 국가기밀이 타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OPEN

3.3m²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가!

지하2층 ~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 4억60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평×150만원 12억8100만원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지상2층 ~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지상3층 ~ 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